

< 기자회견문 >

국민의힘 김기현 형제의 '30억 원' 비리 의혹을 덮은 검사와 검찰수사관의 직권남용 및 고소강요 사건을 공수처는 철저히 수사하고 밝혀라!

- 전)울산지검 검사와 검찰수사관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형제들의 '30억' 아파트 사업 시행권 관련 비리 의혹을 덮고 김기현 형제를 고발한 김홍태 씨를 역으로 고소하도록 고발인 김홍태 씨의 지인들에게 집요하게 고소를 강요한 의혹이 있습니다.
- 검찰수사관은 고발인 김홍태 씨와 가까웠던 현대자동차 소속 젊은 노동자에게 “본인이 (김홍태 씨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 않으면 인터넷에 올린 글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되어 회사에서 해고 사유가 될 수 밖에 없다”며 시킨대로 고소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쫓겨나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협박하고, “적극 협조하면 처벌 수위를 낮춰 주겠다”며 의무가 아닌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검찰이 공권력을 이용하여 정의롭지 못한 일을 하도록 강요한 것입니다.
- 이 노동자는 검찰의 협박과 고소강요로 결국 탄원서를 적게 되고 그로 인해 구속을 당한 지인 김홍태 씨에게 전화 걸어 “저 때문에 모든 게 다 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며 검찰 협박과 고소강요로 마음에도 없는 탄원서를 작성했다고 사과합니다. 그 뒤로 이 노동자는 검찰의 강압수사 등에 의한 정신적, 심리적 괴로움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 이 사망 사건은 인터넷 언론과 울산지역 등에 널리 알려졌지만 왜 사망 사건이 발생했는지, 누가 이 젊은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 한 가정의 아버지이자 남편인 이 노동자의 죽음에는 전)울산지검 검사와 이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검찰수사관의 집요한 고소강요가 있었고 삶의 벼랑 끝에 선 젊은 노동자를 절벽으로 밀어버리는 정황이 확인됩니다.
- 이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울산시장일 때 일어난 일로, 본인의 권력과 가족들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 부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젊은 노동자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의 책임있는 답변이 필요합니다.
- 이뿐만 아니라 검찰수사관은 고발인의 다수 지인들의 개인정보와 금융 정보를 확보한 뒤 전화 걸어 “고발인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해라, 고발자를 고소해라. 검찰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지인들을 협박했고 고소를 강요하는 등 고발인의 지인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 특히, 검찰수사관은 강모씨에게 전화 걸어 “마모씨에게 고발인(김홍태 씨)에 대한 고소를 종용하여 고소가 진행됐다”며 “강모씨 당신도 고발인(김홍태 씨)을 고소하라”는 등 검찰수사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강모씨 등이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 당시 울산은 고래고기환부사건으로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오히려 보복성 수사를 통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형제들 고발사건은 무마시키고 고발인의 지인들에게 탄원서를 받아 김기현 형제들의 비리 고발인 김홍태 씨를 구속합니다.
- 이후 검찰은 2018년 12월에 구속된 김홍태 씨를 약 3개월간 50여 차례나 불러 당시 고발사건과 관련 없는 황운하 울산경찰청장과 송철호 울산시장 관련 비리 사실을 진술하면 풀어주겠다고 지속적으로 의무에 없는 일을 강요하고 회유합니다.

- 형법 제123조에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등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공수처는 김기현 형제들의 비리에 눈을 감은 전)울산지검 검사와 검찰 수사관 그리고 이들에게 이러한 일을 시킨 상관이 누구인지 찾아내어 처벌해야 합니다.
- 검찰이 직권을 남용하여 고발인의 지인들을 협박하여 고소토록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부분도 철저히 수사해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명명백백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 아울러, 앞서 김흥태 씨의 고발내용과 전혀 관련 없는, “황운하 전)울산 경찰청장과 송철호 울산시장 관련 비리 사실을 진술하면 풀어주겠다”고 강요하고 회유한 담당 검사 및 검찰수사관 그리고 이를 지시한 관계자의 불법 및 범죄 사실을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밝히고, 일벌백계(一罰百戒)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를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여 국민이 진실을 마주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1. 11. 30.

더불어민주당 김기현 토건·토착비리 진상규명 TF

(송기현 단장, 양이원영 간사, 이상식 위원(원외위원장), 박창신 자문위원(변호사))

김승원 의원, 김남국 의원, 유정주 의원